"밀가루 담합 신고했으면 671억?" 공정위 신고포상금 30억 한도 폐지

공정위 '포상금고시' 개정안 시행
과징금의 10%, 단일 요율로 일원화
최종 법률관계 확정 시 지급 원칙
내부 은밀행위 증거 인정범위 확대

앞으로 기업의 담합 등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면 액수 제한 없이 확정된 과징금의 최대 10%를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 30억원이던 포상금 지급 한도가 폐지되면서, 수백억원대 '포상금 잭팟'을 터뜨리는 내부 고발자도 나올 수 있을 전망이다.

공정위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이하 포상금 고시) 개정안을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다만 시행일 전에 신고·제보된 사건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포상금 지급 상한액을 없애고 과징금액이 클수록 지급 요율이 줄어들던 기존 누진 방식을 '과징금의 10%' 단일 요율로 일원화한 점이다. 대규모 사건을 신고할수록 충분한 액수의 포상금을 보장해 내부 고발을 전폭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지금까지 지급된 역대 최고 포상금은 지난 2021년 제강사 고철 담합 건으로 지급된 17억 5000만 원 수준이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조 단위 과징금이 부과되는 대형 사건의 경우 포상금 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뛴다.

예를 들어 최근 적발된 제분사 밀가루 담합 건(최종 확정 과징금 총 6710억원)을 내부 고발자가 '최상' 수준의 증거로 신고했다고 가정할 경우, 기존 제도 아래에서는 최대한도인 30억원만 받을 수 있었지만 개정 후에는 10%인 671억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급 방식도 변경된다. 포상금 규모가 대폭 커진 만큼 최종 법률관계가 확정될 때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소송 등으로 최종 납입이 지연될 수 있어, 과징금이 국고에 최초 납입되면 수백만 원 선의 '기본포상금'을 먼저 준 뒤 불복절차가 끝나면 나머지 '잔여포상금'을 지급한다.

포상금 확대와 더불어 적발이 어려운 내부 은밀 행위에 대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증거 인정 범위도 확대한다.

총수 일가 사익편취나 부당지원 행위의 경우, 기존에는 거래내역이나 거래조건 관련 정보만 증거로 인정했으나 앞으로는 내부자가 아니면 알기 힘든 '지원의도'와 관련된 정보까지 증거인정 범위에 포함하기로 했다. 거래 조건만으로는 위법성 입증에 한계가 있는 경우 내부 고발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하도급 거래에서 빈번한 '기술유용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공정위와 협력하는 '기술보호감시관' 활동 등에 대한 포상율 상향 근거도 마련했다. 반면, 제도의 악용을 막기 위해 신고자가 사회적 책임을 준수하지 않거나 법 위반행위에 가담한 수준 등을 고려해 포상금을 최대 30% 범위에서 감액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포상금 고시의 개정·시행으로 대규모 담합 등의 위반행위에 대한 내부고발이 활성화되고, 기업들에는 내부 가담자 중 누군가 언제든지 신고를 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줘 담합과 같은 불공정거래행위를 억제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metro

벨기에 브뤼셀 소재 유럽연합 청사에 EU 깃발이 걸려 있다. /AP·뉴시스

환경산업기술원

국제 탄소규제 대응 국내기업 전략 모색

법적·경제적 위험요인 진단하고
실질적 위험 관리체계 구축 지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17일 국제 탄소규제에 따른 '국내 기업의 대응책 마련'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유럽연합(EU)을 비롯한 세계 주요국은 제품의 전과정 탄소 배출량 제한 및 정보 공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규격 미달이나 의무 미이행 시 법적 제재와 경제적 불이익이 불가피하다.

이번 행사는 이러한 규제 변화 속에서 우리 수출 기업들이 직면한 법적·경제적 위험 요인을 진단하고, 실질적인 위험 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발제자로 나선 설동근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주요국 제품 탄소규제의 요구사항을 공유했다. 또 규제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우리 기업이 감당해야 할 법적 책임과 경제적 손실 등 구체적인 위험 요소도 소개했다.

유창우 LG CNS 총괄은 산업계의 대응 동향을 전했다. 제품 탄소규제에 따른 기업 현장의 주요 위험 관리 방안을 소개하고, 산업계 대응 사례를 통해 제품 탄소 배출 데이터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한미전략투자공사 초대사장에 박종원

〈前 산업부 통상차관보〉

한미전략투자기금 운용 지휘

초대형 대미 투자 사업을 총괄할 한미전략투자공사의 초대 사장으로 박종원(56) 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사진)가 17일 임명됐다.

박 신임 사장은 서울대 국제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인디애나대 로스쿨에서 석사 학위를 받은 정통 산업통상 관료다. 1997년 행정고시 40회로 공직에 입문한 뒤 산업부에서 반도체디스플레이과장, 자동차항공과장, 중견기업정책관, 통상차관보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다. 특히 반도체디스플레이과장 재임 시절에는 일본의 핵심 소재 수출 규제 조치에 맞서 국산화 및 공급망 다변화 대응을 주도한 바 있다.

아울러 대통령비서실 산업통상자원비서관실 행정관, 주영한국대사관 상무참사관을 거쳤으며,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경상남도 경제부지사를 역임하며 중앙과 지방 행정을 모두 경험했다.

총 20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전략적 투자를 집행하고 '한미전략투자기금'의 조성 및 운용을 전담할 한미전략투자공사는 18일 공식 출범한다. 공사는 작년 11월 한미 양국이 맺은 업무협약에 따라 추진되는 전략적 투자의 재원 조성과 관리·운용 등을 맡는다. 투자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은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해 이날 시행된다. 공사는 설립등기일부터 20년간 운영된다. 법정 자본금은 2조원으로 정부가 현금으로 연차별 분할 납입한다.

/세종=한용수 기자

해수부, 전국 4개권역서 '재난대응 연수'

AI 활용 미래 재난대응체계 등 공유

해양수산부가 이달 25일까지 전국 4개 권역에서 순차적으로 '해양수산 재난대응 역량 강화 합동연수회(워크숍)'를 개최한다.

해수부는 매년 지방정부, 소속기관, 관계기관 등이 참여하는 연수회를 개최해 왔다. 선박사고, 대규모 해양오염 등 주요 재난에 대한 대처방안 논의 및 기관 간 협력 강화가 목적이다.

올해 연수회는 18일 부산을 시작으로, 22일 서울, 23일 강릉, 25일 광주에서 열린다. 지방해양수산청, 광역·기초단위 지방정부, 항만공사, 수협, 해양환경공단 등 총 70여 개 기관에서 250여 명의 재난업무 담당자가 참여한다.

연수회에서는 ▲국가재난관리체계와 위기관리 매뉴얼 ▲선박사고·해양오염·해파리 출현 등 주요 재난 사례와 대응 요령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어선원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제도 ▲여름철 풍수해 대비 상황 등을 공유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미래의 재난대응체계 등 새로운 재난관리 동향 공유와 함께 재난안전 인문학 등 교양 강의 프로그램이 편성됐다.

이수호 해수부 해사안전국장은 "재난은 초기 대응과 기관 간 긴밀한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연수회를 통해 해양수산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를 더욱 견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미국 캘리포니아 애너하임에서 열린 K-푸드 박람회. /농수산식품유통공사

K-푸드, 기존 먹거리 넘어 글로벌 라이프스타일로 도약

농식품부 'K-푸드 수출기획단' 회의
K-이니셔티브로의 진화 추진 전략
관광·외교·콘텐츠 등 연계 계획

K-푸드의 추가 확산방안 논의를 위해 정부부처(6곳)와 유관기관, 대기업 관계자 등이 한데 모였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를 비롯해 외교부, 재정경제부, 산업통상부 등은 17일 각각의 추진책을 공개했다. 정부는 그간의 식품 중심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K-푸드가 해외 곳곳에 라이프스타일로 자리 잡게 유도하는 '위상 강화'를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17일 서울 종로구 소재 대중문화교류위원회지원단에서 '제2차 민·관 합동 K-푸드 수출기획단' 회의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기존의 먹거리를 넘어 이른바 'K-이니셔티브'(한국의 주도적 역할·추세의 선도)로의 진화를 추진하다는 전략을 도출했다. K-푸드의 가치의 세계무대 확산을 위해, 콘텐츠·미식 관광·식문화 외교·메가 이벤트 등과 연계한다. 이를 통한 주도권 확보가 중요하다고 봤다.

우선 '미식 관광형'이 제시됐다. 농식품부가 추진 중인 K-치킨벨트, 찾아가는 양조장 등 K-미식벨트 관련 정보를 문체부의 한국 관광홍보플랫폼(VISIT KOREA) 등에 게재하는 방안이다. 농식품부는 향후 K-미식벨트를 지역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테마별 관광지도와 제품 판매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식문화 외교형'으로, 국제회의나 주한외교단 행사 시 'K-푸드 프리미엄 선물세트'를 제작해 배포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권역별 역사·식문화 배경 등을 고려해 한과·정과·전통주 등의 프리미엄 K-푸드를 나전칠기, 백자 등 고급 전통용기에 담아 제공한다.

'콘텐츠 융합형' 방안도 나왔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한 K-푸드 챌린지, 글로벌 OTT를 통한 온라인 마케팅 확대 등이 논의됐다. 농식품부는, 참신하고 다양한 K-푸드 홍보 콘텐츠 발굴을 위해 전국 대학(원)생(외국인유학생 포함)을 대상으로 공모전을 개최할 예정이다.

정부는 그동안의 성과 점검도 실시해 개선안 마련에 나선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이 직접 '재외공관 K-푸드 수출업무 지원 매뉴얼'의 활용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또 하반기 전략회의를 통해 거점 공관 30개소의 수출지원 성과도 살핀다.

산업부는 인도·아프리카·중남미 등 잠재시장 진출을 위한 현지 공동물류센터 활용을 맡는다. 문체부와 대중문화교류위원회지원단은 K-푸드가 음악·웹툰·영화 등의 다양한 분야와 폭넓은 협업의 기회가 더 늘어나도록 비즈니스 교류의 장 확대를 마련한다.

또 중기부와 지재처는 각각 'K-푸드 스마트 제조 얼라이언스' 추진, 한국제품 인증제에 대한 K-푸드 수출기업의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식약처는 중국 해외생산기업 등록 규정 개정 등 해외식품 규제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담당한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GTX-C, '기존 변전소 활용' 모의실험 합의

청량리변전소 설치에 입주민과 갈등
권익위, 내달까지 모의실험 완료 조정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 공급용 변전소 설치를 둘러싸고 아파트 입주민들과 정부·시행사 간에 벌어지던 첨예한 갈등이 극적인 돌파구를 찾았다. 아파트에서 불과 18m 거리에 변전소를 새로 짓는 대신, 기존 변전소를 활용해 철도를 운행할 수 있을지 검증하는 '모의실험(시뮬레이션)'을 진행하기로 전격 합의하면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역 롯데캐슬SKY-L65 아파트 입주민 3500여 명이 제기한 청량리변전소 설치 관련 집단민원에 대해 관계기관과의 현장조사 및 실무협의를 거쳐 최종 조정안을 마련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갈등은 양주와 수원을 잇는 GTX-C 노선용 청량리변전소가 단지에서 불과 18m 떨어진 위치에 설치된다는 계획이 알려지면서 촉발됐다.

아파트 입주민들은 공사 중 발생하는 소음·분진·진동 등 환경 피해는 물론, 굴착에 따른 건물 손상 가능성과 준공 후 전자파로 인한 건강 문제를 우려하며 변전소 설치를 반대해 왔다. 반면 국토교통부와 사업 시행사인 지티엑스씨는 해당 변전소가 철도 정상 운행을 위한 필수 시설이며 적법하게 진행되고 있어 부지 이전은 곤란하다는 입장이었다. 갈등이 심해지자 입주민들은 올해 2월 국민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국민권익위가 여러 차례의 협의 끝에 마련한 조정안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지티엑스씨, 동대문구는 새로 변전소를 짓지 않고 기존 변전소를 활용하더라도 GTX-C 노선의 정상 운행이 가능한지를 검증하는 모의실험을 올해 7월 말까지 완료하기로 했다.

/세종=한용수 기자